“文대통령, 기꺼이 AZ백신 접종할 것”

오는 6월 영국 G7 정상회의 일정 고려 백신 접종
“긴급출국 필요시 예외 접종 허용…선택없어”
최대 8주 간격 2회 접종 감안…4월 초 접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영국에서 예정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고려해 신종 코러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매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질병관리청은 전국민 대상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예외 경로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6월 G7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주에서 최대 8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적어도 다음달 초에 접종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진에게 접종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반 국민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4~5월 중 문 대통령이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

윤석열 사의 1시간여 만에 속전속결 수용

청와대, 이례적 한 줄 짧은 브리핑…‘정치적 행위’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짧은 한 줄의 브리핑문을 발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이뤄진 공개 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총장은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사의 표명이 있고 난 뒤 1시간15분 만에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 소식을 전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됐다.

사의 수용 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을 했던 것도 윤 총장 사의에 크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행안부 입장 급선회 이끌어

끈질긴 설득에 전해철 장관 입장 적극 동의 의사 밝혀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행안위 법안소위 논의가 3일 드디어 시작된 가운데, 시종일관 특별법 제정은 후순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행안부가 입장을 급선회했다.

지난 달 22일 소위에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된 후 한 번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행안부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전해철 장관의 결단이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소병철 의원은 전해철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 역시 왜 진화위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 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진 영 장관도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개별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적은 있었으나, 이 후에도 행안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바뀐 적이 없었다.

여순사건 발생 72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12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데에 이어 이번 소위에서 행안부의 입장 변경은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청신호를 켜 준 또 하나의 희소식이다.

행안위 소위에서 이렇듯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었던 데에는 법안의 대표발의 과정에서부터 소위 상정에 이르기까지 행안위의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직접 만나 설득하고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며 전남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여론전을 이끌어 온 소 의원의 발품과 전략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왼쪽),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손을 맞잡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박형준 확정
유승민·원희룡·홍준표 “힘 합쳐야”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에서 4일 최종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야권 인사들도 축하하며 후보들이 힘을 합쳐 본선 승리를 이루길 기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경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와 국민의힘 동지들은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두 분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겠다”며 “치열한 경선이 끝난 만큼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당 후보들의 본선 승리를 위해 마음을 합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의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야권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경선에서 승리한 오세훈 후보 축하드린다”며 “안철수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로 서울시정 탈환에 앞장 서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시장 후보로 당선 되신 박형준 후보에게도 축하한다”며 “훌륭한 당내 경선을 이끌어 주신 정진석 공관 위원장도 참으로 공정한 경선관리를 해줘 고맙다. 참으로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성추행 정권, ‘문적폐’를 타도해야 한다”며 “서울시정, 부산시정을 탈환하고 나아가 ‘문폭정’을 종식시키고 비정상 국가를 정상국가로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뉴시스

“함께 싸우겠다” “잘못된 결단” 윤석열 사표에 야권 ‘들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 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졌다고 개탄하며 윤 총장과 단일 대오를 형성할 것을 천명했다.

다만 일부 정치권 인사는 사의 표명이 성급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사욕과 안위가 먼저인 정권의 공격에 맞서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윤 총장’님이 사퇴하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5선 정진석 의원은 윤 총장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며 “나와 우리 국민의힘은 문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겠다는 윤석열에게 주저없이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사표 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단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70년 검찰의 명예를 걸고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 세 가지 사건에 전 검찰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 하지 않고 지금 사표를 내면 죽은 권력이던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매몰차게 한 것마저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고 벼락출세를 위한 문재인 청부 수사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어제 대구지검 방문도 정치권 진입을 타진해 보기 위한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검찰총장답지 않은 정치 행위를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